

#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한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9.

발 의 자 : 김한정 · 소병훈 · 김철민  
노웅래 · 원혜영 · 오영훈  
안민석 · 송기현 · 최운열  
문희상 · 이 훈 · 신창현  
설 훈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뿐만 아니라,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.

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 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, ‘가축방역위생관리업’ 도입,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,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,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,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,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,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,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, 구제역·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(안 제3조의3제3항 신설)
- 나.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축산농가 해충방제를 하고자 ‘가축방역위생관리업’ 도입(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)
- 다.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를 포함(안 제6조의2제2항)
- 라.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정액 등 처리업자 추가(안 제17조제1항)
- 마. 환경 부하 완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 및 재활용 방법에 화학적 처리(사체 알칼리 가수분해 등) 방법 추가(안 제22조)
- 바.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, 정화조치 및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(안 제24조의2 신설)
- 사.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,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(안 제48조제1항제3호)
- 아.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(안 제48조제3항제1호)
- 자. 철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 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

마련(안 제52조의3 신설)

차. 구제역·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(안 제55조의  
2제1호 신설)

##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가축방역위생관리업”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제8호 중 “살처분·소각·매몰”을 “살처분·소각·매몰·화학적 처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소각·매몰”을 “소각·매몰·화학적 처리”로 한다.

제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산관계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)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

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(이하 “방역위생관리업자”라 한다)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
3.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

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,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,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2. 제1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
3.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경우
4.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5.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

제5조의4(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) ① 방역위생관리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소독 및 방제 업무 종사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사항을”을 “사항 및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항을”을 “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가축거래상인(「축산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. 이하 “가축거래상인”이라 한다)

제16조제3항 중 “운영자는”을 “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4호 중 “부화장”을 “정액 등 처리업자 및 부화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였는지 여부

제22조제2항 본문 중 “매몰하여야”를 “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“소각·매몰”을 각각 “소각·매몰·화학적 처리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소각·매몰”을 각각 “소각·매몰·화학적 처리”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주변 환경조사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

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,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,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중 “소유자”를 “소유자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해야 한다.

제48조제3항제1호 중 “제17조제2항”을 “제17조제1항·제2항, 제17조의3제1항·제2항·제5항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1항 중 “소각·매몰하는”을 “소각·매몰·화학적 처리하는”으로 한다.

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



농장소유주(관리인 포함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「경찰법」 제2조에 따른 경찰청,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(이하 이 조에서 “경찰관서”라 한다)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, 발·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 번호, 기지국 위치추적자료
2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「유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55조의2 중 “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

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등

2.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

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.

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1항제3호의 4 및 제3호의5를 각각 제3호의5 및 제3호의6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4.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사자에게 그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<u>살처분 · 소각 · 매몰</u> 등 가축 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</p> <p>9. 가축의 살처분 및 <u>소각 · 매몰</u>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(심리적 · 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)</p> <p>10. (생 략)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 <p>제3조의3(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· 운영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살처분 · 소각 · 매몰 · 화학적 처리</u> -----</p> <p>9. ----- <u>소각 · 매몰 · 화학적 처리</u>-----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의3(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·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축산관계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의3(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) ① <u>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</u></p>
---	--

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(이하 “방역위생관리업자”라 한다)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
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

3.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

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 
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  
상 계속된 경우

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  
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 
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 
하여야 하며, 방역위생관리업자  
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  
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 
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 
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  
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방역  
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 
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 
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 
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에 해  
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  
를 명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 
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 
휴업,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
를 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1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 
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

<p>&lt;신 설&gt;</p> <p>제6조의2(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</p>	<p>우</p> <p>3.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4.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</p> <p>5.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 위생관리업을 한 경우</p> <p>제5조의4(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) ① 방역위생관리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소독 및 방제 업무 종사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의2(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</p>
--	---





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·보존하게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③ 가축의 소유자등,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,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·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략)

제17조(소독설비 및 실시 등)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가축거래상인(「축산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. 이하 “가축거래상인”이라 한다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소독설비 및 실시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시장  
· 가축검정기관 · 종축장 등  
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분  
화장의 운영자

5. · 6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  
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 
은 소속 공무원, 가축방역관 또  
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  
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 
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제22조(사체의 처분제한) ① (생략)

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  
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  
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 
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  
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 
----- 정  
액 등 처리업자 및 부화장--

5. ·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  
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  
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  
하였는지 여부

제22조(사체의 처분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  
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 
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  
나 매몰하여야 한다. 다만, 병성  
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  
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 
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  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 
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  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·  
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 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림축  
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
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  
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  
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  
야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  
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 
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  
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소각·매몰 또  
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  
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 
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  
는 해체하지 못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  
여야 --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소각·  
매몰·화학적 처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 소각·매몰·화  
학적 처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 (생 략)

제23조(오염물건의 소각 등) ①  
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 
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  
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  
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 
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 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  
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 
소각·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  
다.

② (생 략)

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 
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  
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  
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 
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  
·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⑤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오염물건의 소각 등) ①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소각·매몰·화학적 처리 ---  
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소각  
·매몰·화학적 처리 ----.

제24조의2(주변 환경조사 등) ①  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2조  
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  
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 
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  
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  
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 
한다.

<p>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(보상금 등) ①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</p>	<p>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 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 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 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 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 변 환경조사,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환경부장관은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 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 부를 확인하고, 이에 따른 조치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(보상금 등) ① ----- -----</p>
---	--

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
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 
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
포함한다)에 따라 살처분한  
가축의 소유자 <단서 신설>

4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  
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 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
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  
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  
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 
있다.

1. 제5조제3항·제6항, 제6조의  
2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 
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, 제  
13조제3항, 제17조제2항 또는  
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
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소유자. 다만, 가축의 소  
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 
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  
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
해야 한다.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17조제1항·제2  
항, 제17조의3제1항·제2항·



인 포함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「경찰법」 제2조에 따른 경찰청,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(이하 이 조에서 “경찰관서”라 한다)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, 발·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 번호, 기지국 위치추적자료

2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「유료도로법」



제55조의2(벌칙)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
제5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

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55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 
-----  
-----.

1.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등

2.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

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
제56조(벌칙) 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<p><u>아니한 수의사, 대학·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</u></p> <p><u>2. ~ 5. (생 략)</u></p> <p>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6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3의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3의4. · 3의5. (생 략)</u>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<u>1. ~ 4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u></p> <p>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60조(과태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.</p> <p>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4.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사자에게 그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</u></p> <p><u>3의5. · 3의6. (현행 제3호의4 및 제3호의5와 같음)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